

통신

‘새미르통신’ | ‘새미르’는 ‘용화회상’과 ‘미륵’을 뜻하는, 전법성지 ‘신용동’의 ‘신용(新龍)’에 대한 순우리말 표기이고, ‘통신(通信)’은 초기 교단의 소통을 담당했던 불법연구회 기관지 ‘월말통신’에서 모셔왔습니다.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성은 전화의 조건 | 원불교정책연구소 환경분석분과에서는 출가교역자의 사회흐름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새미르골 누리지기’를 발행합니다. 본지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종법위의 시사적 주제들로 구성되며, 1~2개월 주기로 교화단보와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구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특성과 영향]

I. 인구변화의 중요성

인구는 개인생활과 사회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미래예측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의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반드시 탐색해야 할 외부변수임.

인구변화에 따라 형성된 사회환경은 다시 인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구-사회’는 상호 인과적 관계에 놓임.

「인구론」 통해 인구 문제를 쟁점화시킨 맬서스(T. R. Malthus, 1766-1834)는 토지의 생산력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간의 번식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 인구통제가 불가피함을 역설.

맬서스의 주장은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으로서 인구 변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인구변화와 연관된 도시집중화, 고령사회화, 여성고용, 출산기피, 자원고갈, 환경파괴, 외국이주자 증가, 범죄문제 등을 고려하면 그의 통찰력은 오늘날에도 타당.

II.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추세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 특성을 지니던 우리나라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1980년대 후반에는 출산과 사망의 양상이 이미 선진국과 동일해졌음(저출산 저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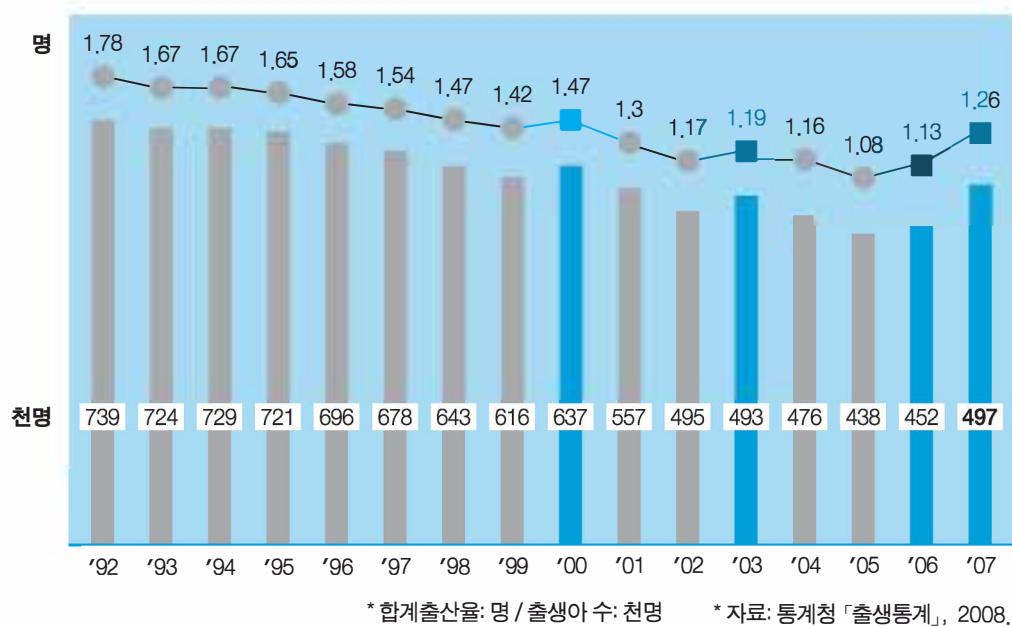
이는 서구가 150-200년 걸린 과정을 단기간에 경험한 꼴.

2006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는 ①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의 실현 ②능력개발과 고용의 확대 ③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반 구축 ④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 등 주제를 축으로 캠페인을 넘어선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종합적 사회 대책을 촉구.

1. 저출산

- 1)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 2005년 합계출산율¹⁾ 세계최저 수준 1.08명을 기록. 하지만 ‘06-07’ 2년 연속 증가세로 전환하자 낙관적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함.
 - 이에 대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출산 욕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경기회복→의식변화→출산의사→출산이행’의 과정으로 파악.
 - 이러한 가설을 따른다면, 경기불황 장기화 시대에는 실업 및 저소득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 부담으로 인해 다시 출산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2. 고령화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
- ①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의 총인구중 비율이 7% 이상
- ②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의 총인구중 비율이 14% 이상
- ③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의 총인구중 비율이 20% 이상.
- 우리나라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그리고 2050년에는 전체 국민의 37%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 예상. 이 중 75세 이상 인구는 2005년 3%에서 2020년 6.6%, 2050년 21.5%로 일반적 고령화 추세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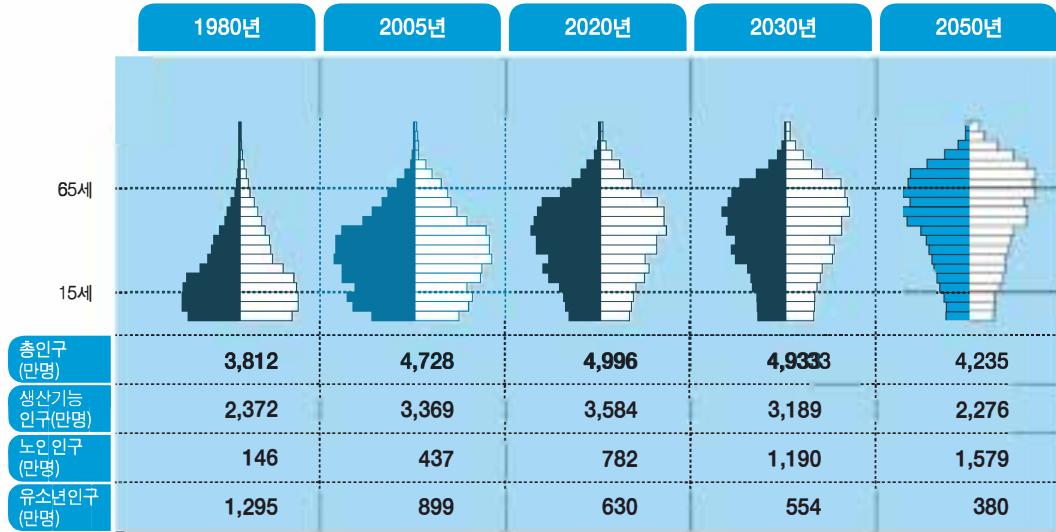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3. 인구감소

- 저출산 고령화 경향이 지속되면 '05년 현재 0.44%인 인구증가율은 '20년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및 저축/소비/투자 위축으로 경제 활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
-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도 야기.
-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 증가 현상으로 이어짐.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합계출산율 '05년 1,19명, '35년 1,30명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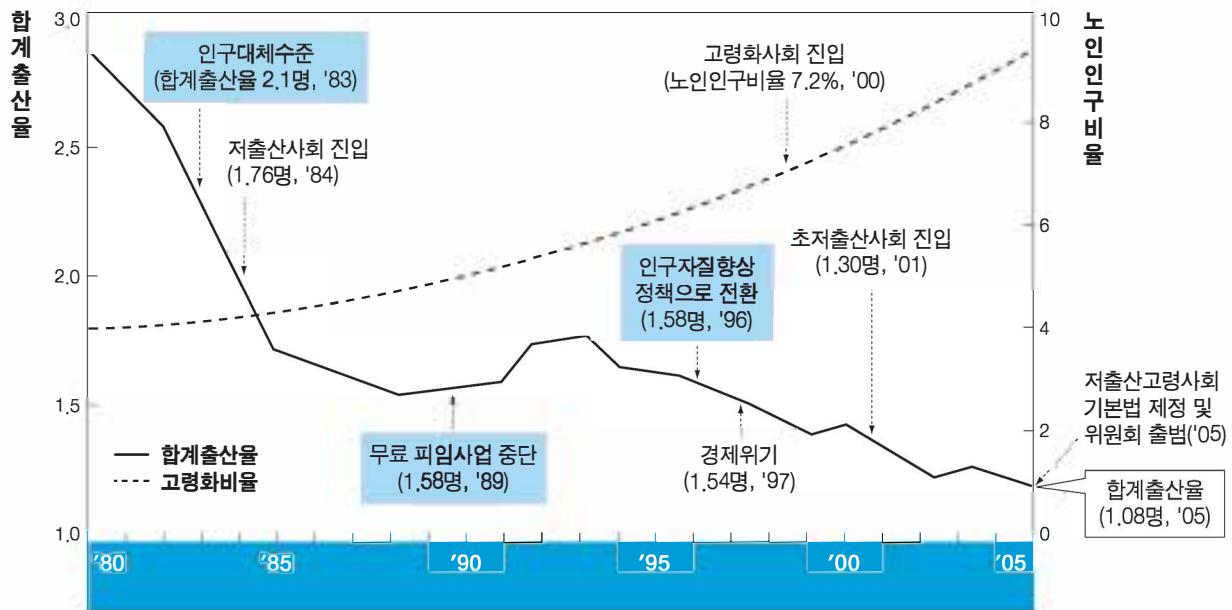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결과, 2006

III.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변화

1. 인구정책 강화

- 84년 저출산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까지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심각성 인식 미흡. 출산, 양육, 고령화와 관련된 사안은 전 국민이 겪는 생애주기적 문제임에도 종전의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어 중산층 및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및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
-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가족복지 차원의 정책들이 합의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²⁾
- 다만,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으로 축소 격하되면서 추진동력이 약화된 측면을 감안할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정책적 적극성을 보여줄지는 의문.
- 인구정책의 방향은 출산/양육의 사회적 지원 확대,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여성 및 고령 인구 대상 성장동력 확보 등으로 설정. 사회적으로는 가부장적 문화와 노인 차별주의(ageism)적 풍토가 개선되어야 함.

저출산 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³⁾



2. 분배를 둘러싼 세대 간 충돌 증대

- 세대 간 문화적 충돌은 상존하지만, 오늘날 대두되는 갈등은 고령층 부양을 둘러싼 분배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실버산업 확산론 및 고령인구의 경제력 등을 근거로 한 낙관적 견해도 있으나, 실제로는 연금/의료 관련 사회보험에 대한 세대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음.
- 부양부담: '05 생산가능인구 8.2명, '20 4.6명, '50 1.4명 당 노인 1명.

3) 인구대체수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인구자질향상정책: 출산율과 같은 인구의 양적 측면보다 인구의 건강이나 역량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독일에선 지난 2003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보험 문제가 세대 갈등 논란을 일으켰다. 기독민주당 청년연합 회의 필립 미스펠더(23) 의장이 "85살 노인이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는 사회보험 체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게 기폭제가 됐다. '일하는 세대'가 '은퇴한 세대'의 도후를 책임진다는 암묵적 '세대계약'에 의문을 제기한 것. 이에 독일 정부는 지난 1월 퇴직 연령을 67살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령을 점차적으로 높여 2029년에는 정년을 67살로 하겠다는 것.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산 위기에 놓인 연금체제를 구하기 위한 방책이다.

(한겨레) 2006.03.05

3. 성장지역과 후퇴지역의 분열

- 인구의 도시집중 경향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중심지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현실적 욕망에 의해 지속될 것임.
-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자연스런 인구의 유입과 이탈을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소외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탈 가속화의 원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른 성장지역의 과도한 인구집중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분포는 50년 전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 불과했다. 1970년에는 50.1%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가 동일한 시점을 지나 1990년 81.9%, 2000년 88.3%로 꾸준히 올라가 2005년 90.2%로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80.8%), 영국(89.2%), 독일(88.5%) 등 선진국의 도시화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서울경제), 2009.01.29

4. 이주 외국인과의 갈등 확산

- 인구밀도가 높고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밀림 자본주의' 하에서 이주 외국인에 대한 시각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희생양 찾기' 차원에서 극단화될 가능성 이 높음.
-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외국인 혐오 카페'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 이러한 현상은 2005년 74만 명이었던 외국인 체류자가 지난해 117만 명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고, 2008년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총 혼인 건수의 11.1%에 달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형국임.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적대시하는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 경제불황을 타고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일부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일자리를 뺏고 범죄나 저지르는 '이방인'으로 몰아세우며 외국인 혐오증을 조장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 경제불황이 심해지면서 외국인들을 집단적 불만해소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최근 같은 분위기라면 수년 내 다문화기정 자녀들마저 외국인 혐오증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일신문), 2009.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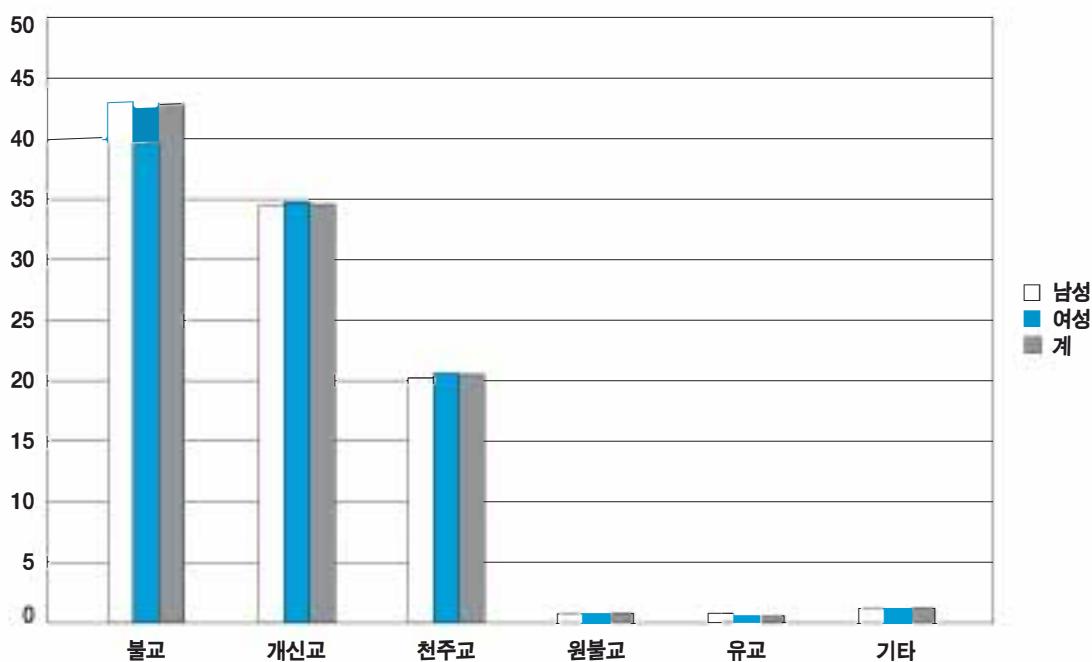
5. 인구의 파편화 - 다양한 가족

- 근대 이후 정상가족으로 인식되던 핵가족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 그 자리를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무자녀가정, 별거가정, 비혼가정, 독신가정(만혼), 대안가정, 동성 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대체.
- 이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흐름이 주도하는 구성적 삶의 지향(전통과 관습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태도)과 밀접하게 연관됨.

통계청 발표 200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가구는 계속 줄고 대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 가족 규모도 작아지고 있음. 2001년 3.06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가 2008년에는 2.79명으로 떨어졌음. 또한, 지난해 전체 가구의 20.1%(335만 7,000가구)는 1인 가구로 2001년보다 3.6%포인트 많아졌음. 반면 핵가족의 전형인 부부+자녀 가구는 2001년 46.9%에서 지난해 41.8%로 감소했음.

IV. 교단적 대처를 위한 열쇳말

우리나라 종교인구 구성(통계청, 2005 인구총조사)



%	종교 有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	종교 無
남	49.7	43.3	34.3	20.3	0.5	0.5	1.0	49.8
여	56.4	42.6	34.7	20.8	0.5	0.4	1.0	43.1

1. 교화의 뿌리, ‘가족’

- 가족 동선은 유아를 중심으로 결정: 보육 및 탁아 시설
- 교육에 대한 열의는 절대적: 장학사업, 대안교육, 부모교육
- 자녀의 인성 함양 욕구 증대: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예절교육
- 가족 통합 프로그램 가동: 가족단위 활동, 양성평등교육, 여성활동 지원

2. 교도 고령화도 하나의 기회

- 사회적 노동으로서 노인 부양: 노인 수용 시설, 부양자 교육
- 품위 있는 노인의 삶: 여가를 즐기고 인생을 정리하는 문화 프로그램
- 주체적인 노인의 삶: 퇴직 후 경제활동을 돋는 역량강화 및 구직 프로그램
- 실버산업과 평생교육: 건강-의료-요양-장례산업 / 만학의 기회 제공

4)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개인 중심의 웰빙을 넘어선 이타적이고도 사회적인 웰빙을 뜻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환경과 사회정의 및 지속 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말함.

3. 웰빙(well-being)을 넘어서 로하스(LOHAS)로⁴⁾

- ‘잘 먹고 잘 살자’는 개인적 추구를 ‘사회적 실천의 삶’으로 전환
- 윤리적 소비와 생태환경의 보존, 귀농 및 도농연계, 환경 관광 등의 조용한 혁명에 동참.

4. 타인과의 ‘끈’을 형성하는 사회연대 교화

- 이주자통합교화: 이주노동자, 미등록노동자, 다문화가정(외국인 신부, 혼혈 자녀, 가정결속) 지원 관련 활동
- 안정과 신뢰 회복: 무한경쟁사회 속의 존재론적 불안을 해소
- 사회적 기업: 이윤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조직 실험 및 지원
- 지역교화: 도시/신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과 욕구에 걸맞은 교화

한국복음전도

원불교 정책연구소

tel 063-850-3382 fax 063-850-3383
570-754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불교 중앙총부